

“3년간 교복 입찰 담합 260건”...광주 27개 업체 적발

공정거래위, 3억원대 과징금 부과 앞서 광주지검 기소 벌금형 선고돼 市교육청 “이미 입찰 제한 등 조치” 계약방식 다양화 등 매뉴얼 개선도

광주 지역에서 지난 3년간 중·고교 교복 입찰 담합 행위를 한 27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복 판매 사업자 27곳에 과징금 총 3억2천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복 판매 사업자 27곳은 2021-2023학년도 교복 구매 입찰 기간 동안 중·고등학교 교복구매 입찰 총 260건에서 담합을 벌였다.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제도에 따르면 개별 학교는 경쟁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교복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납품받는다.

교복 판매 사업자들은 입찰 경쟁이 심화되자 과도한 최저가 경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들러리 참가 요청을 주고받으며 협조하기 시작했다.

특정 입찰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은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들러리 입찰 의사가 있는 다른 업체들이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심사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했다.

이를 통해 담합 입찰 260건 중 226건에서 합의대로 낙찰자가 결정됐다. 나머지 34건 중 32건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제3자가, 2건은 들러리 업체가 각각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교복 판매업자들의 행위가 입찰 또는 경매에서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밀약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것이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사업자별로 100만~2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2023년 이후 검찰 수사 및 형사 판결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고발 조치는 포함하지 않았다. 광주지법은 2023년 12월 입찰방해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교복 대리점주들에게 벌금 300만~1천20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경기·대구 등 전국적으로 교복 입찰담합 총 47건을 적발해 제재해왔다”며 “지난달에는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5곳이 교복 제조사 4곳과 전국 대리점 40개 내외를 대상으로 담합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 안정을 위협하고 가계에 부담

을 가중시키는 교복 담합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공정위 결과는 2021-2023학년도 담합 업체들에 대한 제재로 해당 업체들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교복 담합을 없애기 위해 계약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매뉴얼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부 차원에서 입찰 담합 관련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담합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박선욱 기자



광주경찰청(왼쪽)과 전남경찰청은 18일 올해 6월3일 치러지는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과 전담팀을 꾸렸다. <광주·전남경찰청 제공>

광주·전남경찰, 地選 불법행위 단속 본격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산하 경찰서도 각각 마련 “5대 범죄·담페이크 엄단”

광주·전남경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선)를 앞두고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1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24시간 신속하고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 같은 날 지역 내 5개 경찰서도 각각 별도의 상황실을 꾸렸다.

전남에서도 22개 시·군 경찰서를 포함해 총 23개의 상황실이 설치됐다. 전남경찰도 ▲흑색 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한다.

또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 바탕의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범죄는 단기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광주·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며 최초 제작자와 유포자까지 검거하기로 했다.

광주·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주민의 뜻을 지역 행정에 반영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인 만큼 수사 전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겠다”며 “그간 축적된 선거 사건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빌라서 전기자전거 충전 중 화재 일가족 4명 병원 이송

광주 한 빌라에서 전기자전거 충전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나 일가족 4명이 부상을 입었다. 18일 광주 남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38분께 남구 월산동 한 빌라 4층에서 불이 났

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화재는 신고 접수 40여분 만인 오전 4시21분께 소방 당국에 의해 완전됐다. 이 불로 화재가 발생한 세대의 일가족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

다. 50대 부부와 이들의 10대 딸은 부상 수준이 비교적 가벼운 편이나, 20대 아들의 경우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서울 소재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은 세대 내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자전거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며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형우 기자

음주측정 무력화 ‘술타기’...맥주 들이킨 20대 입건

광주 첫 ‘김호중 방지법’ 위반 북부경찰, 음주측정방해 적용

음주 측정 전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혐의로 A(20대)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42분께 경찰의 음주 측정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술을 마신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전 7시10분께 서구 상무지구에서부터 차를 몰아 북구 우산동으로 이동했다.

그사이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추적에 나섰다.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로 측정됐으나, 그는 “차에서 내린 후 편

의점에서 산 맥주를 마신 것”이라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일명 ‘김호중 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법은 가수 김호중씨가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마신 사건 이후 모범법 방지를 위해 수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술타기 행위는 명백한 음주측정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지난해 6월 시행 이후 광주 지역에서 A씨가 김호중 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첫 번째 사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A씨가 마신 차량에는 동승자 B(20대·여)씨도 있었다. B씨 역시 음주 상태였으나 A씨와 함께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윤찬용 기자

차량 훔쳐 무면허 운전...중학생 4명 입건

광주 북부경찰, 여죄 등 수사

내부에 열쇠가 있는 채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고선 운전을 해 달아난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생 A군 등 4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11시께 북구 오치동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를 운전해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주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 약 3시간 만인 17일 오전 2시께 광산구 일대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피해 차량이 후사경이 접혀있지 않자 문을 열어봤고, 시동까지 걸리자 운전해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서로 다른 중학교에 다니는 A군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윤찬용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